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불가피한가?



김인기 부장  
(WTO국민연대 정책부)

지난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 정부가 세이프가드 해제를 이면합의해 놓고도 이를 숨겨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농업통상에 대한 농민들과 국민들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농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에 타결하려 하고 있어 농업희생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9월에는 지난 2000년 11월 농가부채 투쟁때처럼 대규모 농민시위마저 계획되어 있어 정부와 농민단체가 한판 힘겨루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것들이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는 농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 농민들이 정부가 모처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을 이처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신중히 검토해보고 올바른 대안을 모색해야할 시기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해보고 과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불가피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의미와 추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

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으로 일종의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지역협정의 일종인 자유무역협정은 세계적으로 약 200개 정도가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됐으며 그 중 150여개가 발효중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1990년대이후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냉전체제 소멸이후 경제이익 극대화가 각국의 주요한 국가 목표로 대두되면서 자본, 노동, 상품의 원활한 이동이 요구되어지고, 보다 안정적인 시장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이 주변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통합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주의가 강하게 일어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WTO회원국 중 한국과 함께 유일하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던 일본이 올 1월 싱가포르와 지역무역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흐름에 발맞추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 칠레는 잘못 선택되었다

농업계와 학계, 국내 NGO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으로 칠레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과 경제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농업계가 일방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 하필 농업강대국이며 세계과수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칠레를 상대로 무리한 협상을 추진하려는 것이 농업계의 주장이다.

칠레는 농업부분 생산액이 국내총생산액의 5.7%에 불과한 반면 대외부역에서 농업부분의 수출액이 29.7%를 차지하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다. 그중에서도 과일수출이 강세를 보여 전체수출액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칠레의 농업 특히 과수산업이 이처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천혜의 자연조건과 풍부한 노동력을 빼놓을 수 없다.

칠레는 건조한 기후와 낮과 밤의 현저한 일교차로 과실재배에 가장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건조한 기후로 인해 병해충이 거의 없는 나라이다. 건조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안데스산맥에서 유입되는 풍부한 물은 칠레 과수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칠레의 농업은 대규모 플랜테이션 형태로 2000ha이상의 대규모 경영체가 전체 토지의 60%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80만명에 이르는 양질의 저임금 노동인력이 여기서 일하고 있다. 또한 여유 노동인력과 유향토지가 많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재배면적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도 1차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자국수입관세율을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단일관세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산물수출진흥을 위해 외무부 소속의 프로칠레(PROCHILE)라는 준독립법인 성격의 수출진흥기구를 설치하여 수출업체와 협조하여 해외시장 조사 및 적극적인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칠레의 천혜의 자연조건과 민·관이 하나된 수출증대노력은 미국까지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기피하게 만들 정도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농업강국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칠레산 과수의 범람으로 우리 과수산업의 붕괴와 이로 인한 농업분야의 연쇄적인 도산이 우려된다. 한·칠레 FTA가 체결될 경우 포도, 사과, 배 등 과실류와 낙농, 양돈, 양계 등 축산업에서의 직접 피해액만 연간 2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리가 얻을 공업분야에서의 이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는 모든 국가에 대해 일반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매년 관세율을 낮춰오고 있다.

2002년 7%, 2003년 6%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관세율인하는 계속될 전망이다. 굳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하는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3월말 농업계의 칠레 농업현장 방문 결과에 따르면 칠레 주재 상사주재원 들조차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 인구가 1천500만명에 불과하고 1인당 소득이 4천불에 불과한 국가에서 단 몇%의 관세감축으로 얼마나 많은 수출증대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몇십, 몇백 %의 관세감축을 통해 칠레산 농산물에 시장을 내어주게 되는 꼴이니 얻는 것 없이 잃기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칠레는 분명 잘못 선택된 것이다.

## 농업분야를 제외하라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결코 장미빛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세웠던 여러가지 장점과 긍정적 효과들이 과대포장되어졌음이 명백해지고 생각보다 농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란 연구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한발 물러서 대통령의 약속(국가 신인도)이라는 이유와 WTO체제하에서 우리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꼭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농업 분야는 협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는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일방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캐나다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문화산업이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체리 등 신선과일을 무관세 협정에서 제외했다.

또한, EU와 멕시코의 경우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WTO의 농산물시장개방일정 등과 조화되는 방식과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관세철폐 및 감축방식은 현행 관세수준과 수입관리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였으며 곡물, 낙농품, 육류 및 가공과채류 등은 협정 발효 후 3년내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WTO 농업협상 이후로 미루고 있다.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근본적으로 자유무역협상에서 농업분야 제외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농업분야의 피해가 적은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는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WTO농업협상 이후로 연기하라

**현** 재 WTO농업협상이 진행중이다. 지난 UR 협상보다 큰폭의 농산물시장개방과 관세감

축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가 세계적인 농업강국 칠레와 농산물분야까지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경우 다른 농업강국들로부터 동등한 수준의 농산물 시장개방압력에 부딪힐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정부가 애써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농산물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 앞에서 열악한 우리의 농업현실을 설명해야 정부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순간 우리의 논리들은 모든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과수산업과 일부 축산업분야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과수산업의 붕괴에 따른 다른 농업분야의 도미노식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WTO농업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농업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번 WTO농업협상에서 우리 최대의 목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미 OECD에 가입한 국가이며, 국제교역량 세계 10위 안에 드는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협상을 해도 불안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농업강국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농업의 실상을 토대로한 개도국 지위 유지논리를 완전히 부정하게 만든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당연히 WTO협상 이후로 연기해야 할 것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택한 것부터 잘못되었다. 따라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중단하고 다른 대상국을 찾으려 한다. 만일 국가 신인도 등을 이유로 굳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면 양국간 가장 민감분야인 농업분야를 제외시키거나 WTO농업협상이 끝난 이후로 연기해야 할 것이다. ㉞